



Economy

코스피 2962.42 (-34.79)	코스닥 1031.26 (-4.20)
금리 (미국 3년) 1.974 (+0.011)	환율 (원-달러) 1182.50 (+2.60) (17일)



[경제종합]
현대모비스 조성환號
360도 스크린 등
첨단기술 뽐낸다
03

동료평가·직급폐지 뉴삼성發 인사 혁신 재계로 확산 분위기

삼성전자가 인사 제도를 대폭 개편하며 '뉴 삼성'을 본격화한다. 수평적인 구조로 능력과 실용 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계에도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일단 임직원과 노동조합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편안을 확정해 이달말 확정, 부서별로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알려진 개편안 초안은 조직 수평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트라넷에서 인사연도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사번 표시를 없애는 내용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동료평가제를 도입해 업무 평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하기로 했다.

방 이후 백신 확보와 반도체 투자 등 급한 현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내부 개편에도 착수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섰다 분석이다.

이같은 개편안이 삼성전자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IT와 전자 등 이미 여러 회사들은 직급 간소화 등 수평적 인사 제도를 시행하고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가 동료 평가 제도로 잘 알려져있고, SK그룹도 2019년부터 직급을 TL과 PL 등으로 단순화하고 임원 직급까지 폐지한 바 있다. LG전자도 2017년부터 직원 직급을 사원과 책임, 선임으로 간소화해 운영 중이다. 그 밖에 스타트업과 협력사들도 수평적인 인사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이같은 수평적 인사 제도는 더 확대될

삼성전자, 6년 만에 인사 제도 손질
임금 기본 인상을 폐지, 절대평가 등
MZ세대 아우르는 유연·수평적 개편

인기투표 전략, 분란 조장 등 우려
'호봉제 요구' 노조 반발 가능성도



동료 평가제는 평가 대상자가 지정한 부서원에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팀내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절대평가 확대 방침도 큰 변화다. 최상위 10%만 구별하고, 나머지는 절대평가로 성과에 따라 평가하겠다는 것. 상대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임금 제한도 없었다. 임금 기본 인상을 폐지하고, 직급에 따른 상한선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직급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이다.

삼성전자가 인사 제도를 개편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직급을 간소화하고 호칭도 '프로'로 통일했다. 5년여만에 인사 제도를 다시 개편하면서 조직을 더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탈바꿈, MZ세대도 아우르는 합리적인 체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도 본격화됐다는 기대도 나온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개혁이 쉽지 않았던 상황, 가석

전망이다. 삼성전자 협력사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삼성전자 인사 제도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미 인사 체제를 개편했던 다른 대기업들도 추가로 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이미 재계 대부분은 인사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새 인사제도가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가 동료 평가 제도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던 것과 같이, 자칫 인기투표로 전략하거나 팀내 분란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 팀내 기여도보다는 기술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펠로우와 마스터 등 임원 승진 대상자를 평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본 임금 인상 폐지와 절대 평가에 대한 반발도 문제다. 사측과 협상 중인 삼성전자 노조가 '호봉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어서다. SK하이닉스는 절대평가를 골자로 하는 '셀프 디자인'을 도입했다가 기술사무직 노조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수능 시험장, 내 자리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예비소집에 참여한 수험생들이 시험장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주택 양도세 완화... 10억 전후 매물 풀릴까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초고가 아파트 매물은 가뭄 예상

국회가 추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과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10억원 전후의 아파트 거래는 활발해지는 반면 2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매수세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 양도세편안 추진

1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

역시 양도세 완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양도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로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약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양도 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40%로 일괄 적용되던 공제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10~40%까지 차등 적용하

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40%에서 10%로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10억원 전후 거래량 급증

KB국민은행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5751만원으로 국내 주택소유자의 84.1%가 1주택자다. 법 개정이 시행되면 10억원 전후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라며 "1가구를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j964@

신규 확진 또 3000명대... '위드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 필요... 매주 5단계로 위험도 평가"

중대본, 위험도 평가지표 공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0명을 넘어서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매주 위험도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고위험군의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률 등이 핵심 평가지표가 될 전망이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187명이 발생하며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다. 신

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9월25일 이후 53일만에 처음이다. 위중증 환자도 522명으로 연일 최다치를 기록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21명 발생했다.

방대본은 현재 상황을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코로나19 유행 위험도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공개된 평가지표에 따르면 위험도 평가는 3개 영역 17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이 중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 ▲0세 이상 확진자 비율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등 5개를 핵심 지표로 삼는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만 40% 미만, 40~50%, 50~60%, 60~70%, 70% 이상으로 구분해 정량평가하고, 나머지 지표는 정성평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주기는 1주년을 평가하는 주간 평가와,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평가로 나뉜다.

(4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文, 국민과의 대화 준비 매진... 코로나·부동산 현안 /사진 뉴스스
▲ 이재명 "기본주택 입법논의 해달라" ... 여야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

▲ 홍준표 "평당원으로 대선 백의중군" ... 선대위 합류 선긋기
▲ 박범계 법무장관 방미... 유엔 법무·대테러 관계자 면담



▲ 이인영 "중전선언, 지혜로운 해법... 북에도 긍정 메시지" /사진 뉴스스
▲ 코스타리카 대통령 21일 국빈방한... 문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